

# 23층 투신자 구한 에어매트... 노후·미인증 '숙제'

광양 아파트 투신 무사히 구조  
광주·전남 매트 대다수 기준 초과  
아파트 단지 보유 장비도 미인증  
구조자 안전보장 제도 개선 시급

지난 8월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공기 안전매트' (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가 실패하면서 소방청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광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시도자가 에어매트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 위급상황에 필수적인 안전매트이지만 지역에서 사용되는 상당수는 노후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광양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10분께 광양시 중동 한 아파트 23층 옥상에 A씨가 위태롭게 걸터 앉아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광양소방서 측은 구조대, 중마고가 사다리차 등 5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소방 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2개와 일반 매트 2개, 이탈방지장치로 구조됐다.

이날 사용된 매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5층형 모델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광주·전남 소방당국이 사용 중인 에어매트 중 일부는 사용기한이 오래됐거나 기본 규격과 다른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광주 소방본부 특수구조대·119구조대와 각 11 안전센터는 42개의 에어매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6개(14.3%)는 내용 연한 7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 기본 규격과 다른 미인증 제품은 10개(23.8%)나 됐다.

전남소방본부 특수구조대·119구조대와 각 119안전센터가 소방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는 총 113개다. 이 중 55개(48.7%)가 내용 연한 7년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본 규격과 다른 미인증 제품도 24개(21.2%)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법령에 담긴 소방장비 관리 업무 처리기준 상 최종 내용연한이 규정되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연장사용을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층건물로 화재나 재난 시 피난 장비로서 에어매트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전국 아파트 단지 역시 에어매트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35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단지는 33곳으로 이 중 20개가 7년 이상 장비였다. 전체 에어매트 33개 중 93.3%인 31개가 5층형 이상 미인증 장비로 파악됐다.

전남 소재 LH 아파트 단지 42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단지는 41곳이었다. 이 중 24개(58.5%)가 7년 이상 장비였다. 전체 에어매트 41개 중 37개(90.2%)는 미인증 장비였다.

에어매트의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 7년으로 지정돼 있다.

용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2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에어매트를 구조 현

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난 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역시 전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에어매트는 고층의 경우 적응성이 낮고 부상 위험이 높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에어매트의 용도는 투신과 재난으

로 인한 피난 상황이 확실히 구별돼야 한다며 화재 대피 시 에어매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어매트를 사용할 경우 1명을 구조한 뒤 다시 공기를 완충해야 하는데 이때 대피시간도 늘어나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투신 시도와 같은 1명을 구조하기 위한 상황에선 에어매트 만한 대비책이 없어 각 건물과 소방에 신형 인증 에어매트 보급이 이뤄지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

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경제적 부분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하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교수는 "노후·미인증 에어매트에 대해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 당국의 예산권이 아직 지자체에 있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양한 소방안전 장비 및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감소로 향후 관련 예산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성아·박찬기 자



아시아아트마켓

개천절인 3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아시아아트마켓'에서 시민들이 태국과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살펴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안도걸 의원 '불법 경선운동·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도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의원 사촌 동생 A씨는 구속 기소하고, 선거 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 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국세 감소 불뚱... 광주시교육청도 허리띠 졸라매야

교부금 1544억원 감소 예상  
재량사업 예산 최소화 등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세수 결손 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미교부된 데 이어 올해도 보통 교부금이 15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여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1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385억원 감소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과 사업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교육청 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기금 적립 규

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지 않은 사업과 재량 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 다.

또 내년도 재원 확보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영암서 공병수레 끌던 8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영암의 한 도로에서 공병이 담긴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영암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18분께 영암 삼호읍 용양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병을 실은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목포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햇빛이 비춰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 금은방서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20대 여성 실형

특수절도혐의로 징역 1년

광주 도심 금은방에서 2분만에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골목길에 위치한 한

귀금속매장에서 5669만원어치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새벽시간대를 노린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 길가에 있는 대리석 판을 통유리창에 던지고 입간판으로 진열장 유리를 모두 깬다.

이후 매장 안에 들어간 A씨는 단 2분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를 타고 내린 A씨는 옷을 갈아입

으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12시간여 만에 도심 카페에서 검거됐다.

재판장은 "범행은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귀금속은 모두 되돌려줬다고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